

02

FTA 동향

- ①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 ②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 만든다
- ③ 수출 호조 품목 동향 - 김
- ④ 중국 입맛 사로잡은 K-치즈, 3년간 수출 '2배'
- ⑤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 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5개국서 발효





- ①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 ②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 만든다
- ③ 수출 호조 품목 동향 - 김
- ④ 중국 입맛 사로잡은 K-치즈, 3년간 수출 '2배'
- ⑤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 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5개국서 발효

FTA 동향 ①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졸업과 신학기 시즌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수입 화훼류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통하여 국내 화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내 주요 수입국인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외국산 화훼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절화(折花)의 규모 : 2014년(4,800톤, 미화 1,800만 달러) → 2023년(1만 500톤, 미화 6,300만 달러)로 중국 등과 FTA 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은 210%, 수입액은 350% 증가하였음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 건수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 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 차지

이를 위해 저가 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FTA 동향 ②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 통관 플랫폼 만든다



관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급증하는 해외 직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체계를 전면 개편한 수입 통관 플랫폼을 만든다.

기존 기업 간 무역 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 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배송 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6,358만건	8,838만건	9,613만건	13,145만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5%	41%	10%	37%
전체 수입건수 중 전자상거래 비중	81%	85%	87%	89%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 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 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 수입신고서에 거래 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 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 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③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쿼알(QR) 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 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FTA 동향 ③

수출 호조 품목 동향 - 김

팬데믹 이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현지 입맛과 건강까지 고려한 김 스낵 등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 우수한 원료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산 김의 품질과 맛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김은 친환경 건강식품이자 채식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 김 스낵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김 소비 시장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에서도 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는 국가별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하락(생산에 맞지 않는 환경), 나라별 식문화, 한류 음식(K-Food) 열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김(HS 1212.21호)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일본, 태국, 중국, 러시아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김(HS 1212.21호) 수출액*

단위: 천만달러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0,485	210,308	219,303	286,761
일본	99,482	75,186	75,060	108,167
태국	40,514	39,102	40,275	62,304
중국	26,141	49,767	52,312	51,312
러시아	16,945	26,150	30,674	44,247
미국	17,403	20,103	20,982	20,7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 국가에 대한 수입 규제를 살펴보면,

(1)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입 할당을 받은 바이어를 통해서만 수입 가능하며 김 제품별로 분류된 수입 할당을 바이어가 각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별 수입 할당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2018년 일본 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의무화되며 수입 식품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별도의 위생 증명서 첨부 요구 가능).

(2) 태국

제조업자의 경우 원료용 마른 김 수출 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한 식품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 해초류를 원료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산부로부터 취급에 관한 허가(License)도 취득해야 한다.

(3) 중국

김은 수출 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경화물통관증, 수입 식품 위생 검역, 입경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 성분, 포장 등 미비할 경우 수출을 거부당한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러시아

러시아는 식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엄격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조 해조류는 ‘수산물안전에 관한 법률(TP TC 021.2011, TP TC 040.2016)’의 기준에 따라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년부터 러시아로 수출하



는 모든 식품에 성분, 설명서 등을 포함한 라벨을 러시아어로 작성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5) 미국

미국으로 김 수출 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유기농' 문구를 패키징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상호동등성협정에 따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6) EU

더불어, 주요 수출국 외 유럽으로 김을 수출하는 데 있어 요오드 함유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요오드 함량 기준치 규정이 없으나, EU는 1kg당 20mg으로 요오드 함량 기준치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김 제품의 요오드 함량 기준치가 높으면 유럽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장지에 요오드 함유량을 표기하고 일일 권장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수온 상승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김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업들은 유통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김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김 수출 기업들이 이에 발맞추어 상기 명시한 국가별 수입 규제를 꼼꼼히 확인한 후 FTA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FTA 동향 ④

중국 입맛 사로잡은 K-치즈, 3년간 수출 '2배'

국내 유업 가격↑ 소비↓

가격 인상과 소비 감소 현상, 그리고 수입 우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업 기업들은 중국 치즈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HS 0406호로 분류할 수 있는 '치즈와 커드(curd)'에 대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對중국 치즈(HS 0406호) 수출금액량

단위 : US 달러

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2월)
치즈와 커드(curd)	1,555,512	2,650,301	4,314,185	3,252,332	3,357,19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2019년 155만 달러였던 대(對)중국 치즈 수출은 2023년 12월 기준 335만 달러로 2배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주로 슬라이스 치즈를 위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중국 정부의 수입 제품 규제 때문에 상황이 쉽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치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과·제빵이나 피자 등에도 치즈가 쓰이는 만큼 관련 소비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치즈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전까지 치즈를 주로 소비했던 유럽·북미권과 달리 중국은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중국 소비자의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치즈는 중국 유제품 산업의 중요한 성장 포인트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치즈 회사들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영양을 신경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맛과 포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치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업들이 치즈 시장을 선점하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이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의 선호 포인트를 캐치하고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중국 치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TA 동향 ⑤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영국이 기존에 맺은 자유 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사흘 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영국 정부와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의 안창용 산업부 자유

무역협정정책관과 영국의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의 협정을 최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바이오 경제,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통상 규범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이 지난 2019년 서명한 FTA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처음 맺은 FTA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영 FTA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발전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 등의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디지털, 공급망 등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이번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개회식에 참석해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5개국서 발효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일부 국가에서 처음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보도 자료를 통해 IPEF 공급망 협정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5개국에서 내달 24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 뒤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인 작년 5월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 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협의로 담겨 있다.

협정 타결 후 작년 11월 일본이 처음 비준서를 IPEF에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미국(2024.2.5)과 싱가포르(2024.2.12), 피지(2024.2.24), 인도(2024.2.25)가 차례로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5개국 기탁 조건'이 충족됐다.

한국은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역시 국내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핵심 품목 선정, 이행 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망 협정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 간 논의에도 참여해 향후 IPEF 참여국 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